

## 2021. 09.11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영역별 출제 비중 및 출제 테마 정리]

| 출제 영역 | 비중   | 출제 테마                        |                               |              |
|-------|------|------------------------------|-------------------------------|--------------|
| 기초이론  | 2/25 | • 사회적 자본                     | • 거래비용이론                      |              |
| 정책학   | 5/25 | • Salamon의 정책수단<br>• 쓰레기통 모형 | • 정책델파이 기법<br>• 정책평가의 절차      | • 정책분석 오류    |
| 조직행정  | 4/25 | • 조직구조의 원리<br>• 피들러의 상황적응이론  | • Vroom의 기대이론<br>• 홉스테드의 조직문화 |              |
| 인사행정  | 4/25 | • 업관주의<br>• 폐쇄형과 개방형 임용      | • 직업공무원제도<br>• 다양성 관리         |              |
| 재무행정론 | 5/25 | • 준예산<br>• 성인지예산제도           | • 주민참여예산제도<br>• 계획예산          | • 예산의 이용과 전용 |
| 지방행정론 | 2/25 | • 사무배분원칙                     | • 오츠의 분권화정리                   |              |
| 행정환류론 | 3/25 | • 행정개혁 저항극복방안                | • 옴부즈만 제도                     | • 빅데이터       |

2021년 시험부터 시험과목의 변경과 함께 기존 20문항 출제에서 25문항 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어 과목이 공인어학시험으로 변경된 후부터 정책학 단원의 출제비중과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높은(5문항)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1문항 출제되었던 재무행정이 올해 5문항 출제되면서 출제비중이 높아졌고, 0 ~ 1문항 출제되던 행정환류 단원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의 주제들은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평이하고 일반적인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출제 비중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 비중의 변화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어느 한 단원에 소홀함 없이 고르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이도 별 출제 테마 정리]

| 난이도 | 비중    | 출제 테마                                                                            |                                                                                       |                                                                                   |
|-----|-------|----------------------------------------------------------------------------------|---------------------------------------------------------------------------------------|-----------------------------------------------------------------------------------|
| 상   | 3/25  | • 정책분석 오류                                                                        | • 홉스테드의 조직문화                                                                          | • 오츠의 분권화정리                                                                       |
| 중   | 3/25  | • 다양성 관리                                                                         | • 주민참여예산제도                                                                            | • 정책평가의 절차                                                                        |
| 하   | 19/25 | • 사회적 자본<br>• 정책델파이 기법<br>• Vroom의 기대이론<br>• 직업공무원제도<br>• 예산의 이용과 전용<br>• 사무배분원칙 | • 거래비용이론<br>• 쓰레기통 모형<br>• 피들러의 상황적응이론<br>• 폐쇄형과 개방형 임용<br>• 성인지예산제도<br>• 행정개혁 저항극복방안 | • Salamon의 정책수단<br>• 조직구조의 원리<br>• 업관주의<br>• 준예산<br>• 계획예산<br>• 옴부즈만 제도<br>• 빅데이터 |

(1) 난이도 상

- ① 정책분석 오류는 9급 수험생에게는 정책대안의 관점에서, 7급 수험생은 영가설(귀무가설) 관점에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이론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답은 찾아낼 수 있지만, 정답지가 되는 지문에서 신뢰도와 검정력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 부분까지 완벽히 준비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 ② 흡스테드의 조직문화는 최근에 활용되는 대학교재에서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범위를 설정했을 때 접해보기 어려운 생소한 주제에 해당한다.
- ③ 오츠의 분권화 정리 역시 지방직 7급 선택과목을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주제에 해당한다.

### (2) 난이도 중

- ① 다양성 관리 문제는 “다양성 관리”의 의미를 문제 지문을 통해 파악하고 접근한 수험생은 정답에 접근하기 용이한 반면, “다양성 관리”의 의미가 빨리 파악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부담스런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법령 규정을 잘못된 내용으로 서술하여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에 규정이 있다/없다의 의미로 정답을 가리는 문제여서 수험생들이 정답을 확신있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 ③ 정책평가의 절차 문제는 최근 시험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내용이어서 내용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시험장에서의 생소함이 발생했을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해위주의 학습을 수험생들은 [행정통제의 절차]에 관하 13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를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또는 정책평가의 개념을 토대로 정답을 찾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 (3) 난이도 하

그 외 문항은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정답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4) 종합적 평가

2021년 국가직 7급 시험은 변별력을 주기 위한 3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주제였고, 오히려 4월 있었던 국가직 9급 시험에 비해 난이도 낮은 수준의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해설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이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정답지문까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보다 적중도 높은 문항을 찾아 2문항 정도 6.0 동형모의고사 문항을 제시하였지만, 해당 주제들 또한 5.0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다룬 문항들입니다.)

물론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20개의 문제가 모두 평이할 수는 없으며, 일부 난도 높은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난도 높은 문제가 다소 생소한 주제이지만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문장의 의미를 풀어 나가면 정답에 접근하기에 충분한 문제들이었습니다.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고 다른 수험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실하게 시험 준비를 잘해왔으리라 판단되며, 행정학 점수가 기대 이하여서 합격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기만 하면 행정학 과목에서 원하는 점수만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많은 분량에 학습 과정이 힘이 들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21년 국가직 7급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응시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제도는?

- 사업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다.
-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③ 계획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 정답 || ③

|| 해설 ||

-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사업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조화를 위해 사업구조(Programming)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때 사업구조는 여러 해에 걸친, 여러 조직의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우며, 장기적 예측을 위한 경제적 분석기법이 활용됨에 따라 일반 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장기적 예측을 위한 경제적 기법들의 활용으로 인하여 체제분석청을 중심으로 예산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결정구조가 정부차원에서는 최고 관리자(대통령)를 중심으로, 각 부처 내에서는 장관을 중심으로 집권화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 DIET 행정학 6.0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1회 14번

#### 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 ③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개별부서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은 중시되지 않는다.
- ④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 정답 || ①

|| 해설 ||

- ① 계획예산제도는 1960년대 존슨(Johnson)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Great Society) 프로그램의 실현 과정에서 연방정부에 도입  
→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중지 : 전반적으로 실패한 제도로 인식됨
- ② 계획예산은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 ③ 계획예산은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분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업구조(Programming)를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된다.
- ④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 계획예산은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을 중시하며,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 분석 등 분석기법의 활용에 적극적이다.

2.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③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 ④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②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없이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집행하게 된다. 이에 준예산은 예산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준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의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③, ④ 준예산의 지출 가능 경비는 지출 가능 경비 :
  - ㉠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③)
  -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④)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19회 8번

예산불성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에서 거의 매년 활용되고 있다.
- ②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관되게 준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③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잠정예산과 달리 가예산과 준예산은 국회의결 없이 집행된다.
- ④ 준예산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 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준예산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실제 편성된 적이 없으며, 지방정부 재정에서 실제 편성된 적이 있다.
- ② 우리나라의 예산불성립 시 예산은 1공화국에서는 가예산 제도, 2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준예산 제도이다.
- ③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잠정예산 및 가예산과 달리 준예산은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준예산은 국무회의의 의결로 집행된다.

[Summary] 예산불성립 시 예산

|      |                                                                                                                                                                           |
|------|---------------------------------------------------------------------------------------------------------------------------------------------------------------------------|
| 잠정예산 | ① 잠정적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채택<br>② 잠정예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사용가능함<br>③ 잠정예산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미국은 제한 있음)<br>④ 잠정예산 사용 중에는 전년도 지출 수준에 준해 집행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 가예산  | ① 예산불성립 시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 후 그 기간 내 본예산을 의결하는 제도<br>② 우리나라 제1공화국에서 도입(1공화국 당시 거의 매년 편성함)                                                                                   |
| 준예산  | ① 현행 제도 : 특정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br>②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사용                                                                                              |

|  |                                                                                                                                                                                                                        |
|--|------------------------------------------------------------------------------------------------------------------------------------------------------------------------------------------------------------------------|
|  | <p>③ 국가재정에서 실제 편성된 적 없지만, 지방재정에서는 실제 편성된 적 있음</p> <p>④ 지출 가능 경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li> <li>㉡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li> <li>㉢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li> </ul> |
|--|------------------------------------------------------------------------------------------------------------------------------------------------------------------------------------------------------------------------|

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지방재정법」 제39조 ①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즉, 주민참여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해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단 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며,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규정화되었다.
- ④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강조됨에 따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9회 12번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과정측면보다 결과측면을 강조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민 참여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 ①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이 경우 시민의견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과측면(시민 의견의 반영)보다 과정측면(시민참여 기회의 제공)을 강조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즉 주민의견의 구속력은 없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Summary] 참여예산제도

|           |                                                                                                                                                                                                                                                                                                                                                                                                                                                                            |
|-----------|----------------------------------------------------------------------------------------------------------------------------------------------------------------------------------------------------------------------------------------------------------------------------------------------------------------------------------------------------------------------------------------------------------------------------------------------------------------------------|
| 의의        |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예산제도<br>② 국민참여예산제도(국가재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재정)가 모두 도입되어 있음                                                                                                                                                                                                                                                                                                                                                                                 |
| 도입과정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최초 도입<br>②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2004년 광주 북구, 2006년 전라북도에서 예산혁신 시책으로 도입된 후 2011년「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규정화 함<br>③ 국민참여예산제도 :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과정에 시범 도입 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2019회계연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의무규정화 함                                                                                                                                                                                                                                                          |
| 국민참여 예산제도 |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함<br>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음 : 국민의견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br>③ 정부는 국민참여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음                                                                                                                                                                                                                                                                                |
| 주민참여 예산제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br>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 : 구속력은 없음<br>③ 주민의견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br>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음<br>⑤ 정보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br>⑥ 기타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기타        | ① 주민참여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심사가 이루어져 국가재정에 대한 사업제안은 제외됨<br>② 국민참여예산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제안이 가능해짐                                                                                                                                                                                                                                                                                                                                                     |

4.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정보비대칭성 속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해설

- ② 거래비용은 거래의 상대방을 통제하는 모든 비용으로서 계약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탐색비용, 흥정비용 그리고 계약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권리구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며, 이는 조직경제학으로 분류된다.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5회 18번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석단위를 조직으로 하고 이들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을 탐색한다.
- ②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며, 거래의 외부화는 거래비용이 조정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다.
- ③ 거래비용이론은 비용의 감소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지만, 민주성이나 형평성과 같은 공공 부문의 다른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 ④ Williamson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U형 조직이 M형 조직보다 효율적임을 제시한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④ Williamson은 조직 내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할거주의가 높게 발생하는 U(Unitary)형 조직(기능구조) 보다 부처할거주의가 낮게 발생하는 M(Multi-Divisionalized)형 조직(사업구조)이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 해설

- ① 거래비용이론은 분석단위를 조직으로 하고 이들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을 탐색한다.
- ② 거래비용이론은 조직(계층제)은 내부관리비용(조정비용)이 발생하며, 시장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둘의 비교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한다.

-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며, 거래의 외부화는 거래비용이 조정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다.
- 거래비용이론은 생산보다는 비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 ③ 거래비용이론은 비용의 감소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지만, 민주성이나 형평성과 같은 공공부문의 다른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 거래비용이론은 공공부문보다는 비용과 성과에 대한 측정이 용이한 민간부문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③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해설

- ③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14회 10번

행정 개혁의 저항 극복 방안 중 규범적·협조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                      |
|--------------------|----------------------|
| ㉠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 | ㉡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제공   |
| ㉢ 불만해소 기회의 제공      | ㉣ 개혁추진 가치와 개인이익의 실증  |
| ㉤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개선   | ㉥ 의식적인 긴장의 조성권력구조 재편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 ④

|| 해설 ||

- ㉠, ㉢, ㉤ - 규범적·협조적(사회적) 전략
- ㉡, ㉣ - 공리적·기술적 전략 / ㉥ - 강제적 전략

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 ㉡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 주민의 편익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 정답 || ④

|| 해설 ||

- ㉠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 ㉡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사무의 종합적 처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 보충성 원칙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 ㉣ 보충성 원칙 중 적극적 보충성 원칙에 따를 경우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 비경합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22회 15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소극적 보충성의 원칙은 상급단체나 국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종합성의 원칙을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우선 업무가 배분되어야 한다.
- ㉣ 전국적 기준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 원칙이다.
- ㉤ 경제성 원칙에 따를 때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경우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 ①

|| 해설 ||

- ㉡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은 상급단체나 국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종합성의 원칙을 따를 때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업무가 배분되어야 한다.
- ㉤ 이해관계귀속의 원칙에 따를 때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경우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있다.
- ②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③ 호혜주의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사회적 자본은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 ② Putnam에 따를 때 타인에 대한 신뢰,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 등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 ③ 호혜주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 해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3회 8번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 ㉠ 사회적자본은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 사회적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 이루어진다.
- ㉢ 사회적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 사회적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 ㉤ 사회적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 ㉥ 사회적자본은 구성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고 혁신적 조직 발전을 자극한다.
- ㉦ 사회적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 ㉧ 사회적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 (X) 사회적자본은 가격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재화와 같이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 (X) 사회적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 ㉤ (X) 사회적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 (X) 사회적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해설

- ㉠ (O) 사회적자본은 선순환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 (O) 사회적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 (O) 사회적자본은 구성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고 혁신적 조직 발전을 자극한다.
- ㉦ (O) 사회적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8.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중간관리층의 필요성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낮은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평면구조가 형성된다.

→ 반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좁을수록 중간관리층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고층구조가 이뤄진다.

- 해설

㉠ 보조기관으로서 계선조직은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상관에 의해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기여한다.

→ 보좌기관으로서 참모조직은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조직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 부문화 또는 부서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Gulick은 부문화의 기준으로서 기능, 과정, 수혜자, 지역을 제시한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받는 부하직원의 관점에서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 내 질서 유지와 의사소통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6회 11번

고전적 조직구조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화의 원리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부처 할거주의와 전문화로 인한 무능을 초래할 수 있다.  
 ② 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지휘와 명령 복종관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기여하지만, 구성원의 귀속감 확보와 참여의 저해를 초래한다.  
 ③ 통솔범위의 원리는 조직의 구성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며, 이는 구성원의 책임 소재 명확화, 모순되는 명령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④ 조정의 원리는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문 간 분화된 활동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Mooney는 행정의 제1의 원리로 '조정 원리'를 제시하였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의 구성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며, 이는 구성원의 책임 소재 명확화, 모순되는 명령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로서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계층의 수는 감소하되, 통제의 정도는 악화될 수 있다.

## 9.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 한다.
-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 ③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 ④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긴밀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 해설

- ①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이 강한 경우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 공식화·표준화를 위한 규정을 많이 만들게 된다.
- ③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권력으로부터의 거리가 큰 경우 구성원은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 ④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야심차고 자기과시욕이 강하며 섬세함이 부족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강조한다.

## [Summary]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

|                |                                                                                                                                                                                                                                                                                                       |
|----------------|-------------------------------------------------------------------------------------------------------------------------------------------------------------------------------------------------------------------------------------------------------------------------------------------------------|
| 의의             | ① 홉스테드(Hofstede)는 문화의 다양성을 권력거리, 개인주의 - 집단주의, 남성성 -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시간관념(장기-단기 성향) 측면에서 비교함<br>② 홉스테드는 53개국에서 다국적 기업 IBM 종업원 116,000명의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함                                                                                                                                                     |
| 권력거리           | ① 권력거리란 한 사회에 있어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평등 또는 차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함<br>② 권력거리가 강한 경우 : 권력자의 결정이나 자신과의 지위 차이를 편하게 수용함<br>③ 권력거리는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의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음                                                                                                                       |
| 개인주의<br>- 집단주의 | ① 조직에서의 업무수행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개인을 우선하는지(개인주의), 집단을 우선하는지(집단주의)의 정도를 의미함<br>② 개인주의 :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우선시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소극적임<br>③ 집단주의 :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중시하며 집단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 하고, 사람들과의 화합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함                                                                                                |
| 남성성<br>- 여성성   | ① 남성성이 강한 문화 : 야심차고 자기과시욕이 강하며 섬세함이 부족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강조함<br>② 여성성이 강한 문화 : 물건의 소유와 같은 외적이고 양적인 성공보다는 불행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등 인간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지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보다 평등을 선호함<br>③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최고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여성성이 강한 문화는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제시함                                                             |
| 불확실성<br>회피     | ①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함<br>②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불안이나 반대 또는 대립을 기피하고 안정과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함<br>→ 불확실성의 회피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나 사회규범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며,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규정을 활용하고자 함<br>③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가 약한 사람은 의견차이나 다양성을 높이 평가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위험을 피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경향을 가진다. |

|               |                                                                                                                                                                                                                                                                                               |
|---------------|-----------------------------------------------------------------------------------------------------------------------------------------------------------------------------------------------------------------------------------------------------------------------------------------------|
| 장기<br>- 단기 성향 | <p>① 흡스테드가 위 4가지 측면의 문화를 분석한 후 중국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장기 - 단기 성향을 추가함</p> <p>② 장기 성향이 강한 사회 :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을 가진 경우이며, 현재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상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짐</p> <p>③ 단기 성향이 강한 사회 : 전통보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응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성향이 강함</p> |
|---------------|-----------------------------------------------------------------------------------------------------------------------------------------------------------------------------------------------------------------------------------------------------------------------------------------------|

10.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업구조의 조합에 따라 리더의 상황적 유리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을 설명한다.
- ②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사용하여 리더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했다.
- ④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피들러는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며,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 직위에 따른 권력이라는 요인을 제시한다.  
→ '부하의 성숙도'를 리더십의 상황변수로 제시하는 것은 허쉬 & 블랜차드의 생애주기이론이다.

- 해설

- ② 피들러에 따를 때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과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는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반면, 리더십 상황이 중간적인 경우 관계 지향적 리더십의 효과적이다.
- ③ 피들러는 리더에게 가장 덜 좋아하는 동료에 대한 인식조사(LPC, Least Preferred Coworker)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하였다.
- ④ 피들러의 상황적응이론은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해당한다.

DIET 행정학 6.0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6회 18번

Fiedler의 상황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② 리더가 가장 덜 좋아하는 동료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한다.
- ③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로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 과업구조, 직위에 부여된 권력의 세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을 구분한다.
- ④ 상황변수가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경우에 과업중심형 리더십을, 매우 불리한 경우에 관계중심형 리더십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 ④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에 따를 경우 리더십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불리하거나, 매우 유리한 경우에는 과업중심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11.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민주화에 기여                      ②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  
③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                  ④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④ 업관주의는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의 주기적 대량교체가 벌어짐에 따라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저해하는 단점을 가진다.

- 해설

- ① 업관주의는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 민주화에 기여한다.
- ② 업관주의는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 정당원을 공직에 임명하여 강력한 정책추진력과 통솔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 ③ 업관주의는 공직 임용의 기준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에 둬 따라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한다.

##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10회 11번

업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② 행정의 공정성 확보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④ 유능한 인재 등용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업관주의는 교체임용주의로서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의 주기적 대량교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업관주의 인사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 ② 업관주의는 관료가 공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동을 초래하게 되어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 ④ 업관주의 인사제도는 공직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두는 제도이므로 유능한 인재 등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 해설

- ③ **엽관주의 인사제도는 공직의 대량 교체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과 관료의 책임 확보에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즉 **엽관주의 인사제도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의 장점을 가진다.**

1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 근무를 통해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 해설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장기 근무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10회 12번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신규 채용에 있어 경험 많은 사람보다 젊은 인재를 선호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출신집단을 고려한 채용을 통해 관료조직의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임용 방식을 통해 내부 충원을 기본으로 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 임용에 있어 학력과 연령에 따른 제한을 허용한다.

|| 정답 || ②

|| 해설 ||

- ② 출신집단을 고려한 채용을 통해 관료조직의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관료제의 특징이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시험에 의해 능력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진다.

13.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적 규제                      ② 보조금                      ③ 조세지출                      ④ 공기업

|| 정답 || ④

|| 해설 ||

- ④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은 공기업, 정부소비, 대출, 정보제공, 경제적 규제이다.  
 따라서 본 문제의 정답은 공기업이며, 그 외 수단은 간접적 수단에 해당한다.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15회 7번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에 따를 때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 바우처    | ㉡ 조세지출   | ㉢ 공기업    | ㉣ 정부 소비 |
| ㉤ 정부출자기업 | ㉥ 사회적 규제 | ㉦ 경제적 규제 | ㉧ 대출보증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정답 || ③

|| 해설 ||

- 직접적 수단 : ㉠, ㉡, ㉢
- 간접적 수단 : ㉣, ㉤, ㉥, ㉦, ㉧

14.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 ㄴ. 평가 결과 제시 | ㄷ. 인과모형 설정 |
|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 ㅁ. 정책목표 확인  |            |

- ① ㄱ → ㅁ → ㄷ → ㄹ → ㄴ                      ② ㅁ → ㄱ → ㄷ → ㄴ → ㄹ  
 ③ ㅁ → ㄱ → ㄷ → ㄹ → ㄴ                      ④ ㅁ → ㄷ → ㄱ → ㄹ → ㄴ

|| 정답 || ③

|| 해설 ||

- ③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ㅁ. 정책목표 확인 →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 ㄷ. 인과모형 설정 →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 ㄴ. 평가 결과 제시

DIET 행정학 2.0 원리이해 [1권] P. 409

**4 정책평가의 과정**

|          |                                         |
|----------|-----------------------------------------|
| 목표의 확인   |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식적·실질적 목표의 확인          |
| 평가성 사정   | 본격적인 정책평가 이전에 행해지는 평가 기획(평가를 위한 예비평가)   |
| 평가기준의 설정 | 정책목표에 따른 평가기준의 설정 단계(소망성 측면에서 평가기준의 검토) |
| 인과모형의 설정 | 독립변수(정책)와 종속변수(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설정 등   |
| 연구 설계    | 인과모형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결정단계             |
| 자료 수집·분석 | 관찰, 면접, 설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자료의 분석과 해석     |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정책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 활용                 |

15.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수용해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가를 선호한다.  
→ 개방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문능력이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장기 근무가 가능한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으며, 이로 인해 기존 구성원의 사기가 개방형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진다.

- 해설

-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의 개방을 통해 외부전문가나 경력자가 고위직으로 신규 임용이 가능한 인사 제도이다. 개방형 인사는 외부 전문가의 공직 임용을 통해 공직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0회 17번

개방형 임용과 폐쇄형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방형 임용의 도입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에, 폐쇄형 임용은 공직의 일체감 확보에 기여한다.
- ② 개방형 임용은 승진 기회의 제약, 폐쇄형 임용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한 대응성 부족의 문제를 가진다.
- ③ 개방형 임용은 책임확보의 어려움을, 폐쇄형 임용은 정실임용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 ④ 개방형 임용은 단기적 사업계획을, 폐쇄형 임용은 장기적 인력계획을 기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 정답 || ③

|| 해설 ||

- ③ 개방형 임용은 고위직에서 신규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 정실임용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폐쇄형 임용은 신분보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책임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16.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③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④ 대표관료제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균형인사정책은 외적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일과 삶 균형정책은 내적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관리전략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내적 다양성으로서 구성원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들 수 있고 최근에는 내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 ②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다양성 관리로서 내적 다양성은 지향하는 가치, 성격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외적 다양성은 출신 집단 등에 의해 발생한다.  
→ 다양성 관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공직 구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조직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적 관리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④ 대표관료제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출신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0회 16번

대표관료제의 역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              |
|-----------------------|--------------|
| ① 내부통제의 약화            | ② 국민주권원리의 침해 |
| ③ 역차별로 인한 수평적 형평성의 저해 | ④ 작은 정부와의 충돌 |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에 대한 객관적 책임 확보가 비현실적임을 주장하고, 출신집단을 고려한 채용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해설

- ② 대표관료제는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관료제 내부·비공식 통제의 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 및 대의기관의 직접 통제권 약화를 초래한다.
- ③ 수직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표성의 강조가 지나칠 경우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전체 공직 지원자의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다.
- ④ 대표관료제는 전문성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 출신집단을 고려한 채용으로 인하여 정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인적 구성원의 증가로 인하여 작은 정부(감축관리)와의 충돌을 초래한다.

1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 ③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by oversight)와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약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②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일시적 참여자”이다.
- “불명확한 기술”은 문제해결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불명확한 기술”이다.

- 해설

- ③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날치기 통과로서 끼워넣기(by oversight)와 진뻏기 결정으로서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7회 4번

다음 중 쓰레기통 모형이 전제하는 의사결정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부서들이 자신들의 관할범위에만 관심을 보이는 상황
- ②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③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불명확한 상황
- ④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가 유동적이며, 참여자가 부재한 상황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부서들이 자신들의 관할범위에만 관심을 보이는 상황은 회사(연합)모형이 가정하는 ‘국지적 합리성’의 상황에 해당한다.

- 해설

- Cohen, March, Olsen 등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권위 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란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를 특징으로 한다.
- ②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불확정적 선호
- ③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불명확한 상황 : 불명확한 기술
- ④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가 유동적이며, 참여자가 부재한 상황 : 일시적 참여자

18.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 ④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둔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공개토론이 이루어지기에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 해설

- ① 정책델파이는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 ② 정책델파이는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 ④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전문성'에 두는 전통적 델파이와 달리 정책델파이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식견있는 다수의 창도”를 강조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6회 9번

정책 분석방법으로서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기법은 반복적 통계처리를 통해 대안의 결과예측이 이루어지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에 해당한다.
- ②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 기법은 완전 익명성의 보장을 통해 솔직한 견해 수집이 이루어진다.
- ③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 기법 모두 참여자의 범위를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한다.
- ④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 기법 모두 질의·응답의 반복과 통계처리를 활용한다.

|| 정답 || ④

|| 해설 ||

- ①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기법은 반복적 통계처리를 통해 대안의 결과예측이 이루어지지만,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가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라는 점에서 판단적(질적) 미래예측방법에 해당한다.
- ② 델파이 기법은 완전 익명성의 보장을 통해 솔직한 견해 수집이 이루어진다. 정책델파이는 초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익명성을 공개하고(선택적 익명성) 공개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 ③ 완전익명성이 지켜지는 델파이 기법은 불성실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범위를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지만, 공개토론을 가지는 정책델파이 기법은 참여자의 범위를 전문가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한다.

19.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제2종 오류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은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제1종 오류는  $\alpha$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beta$ 로 표시한다.
- ④ 확률  $1 - \alpha$ 는 검정력을 나타내며, 확률  $1 - \bet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④ 확률  $1 - \alpha$ 는 신뢰도를, 확률  $1 - \beta$ 는 검정력을 나타낸다. 반대로 제시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다.

- 해설

- ① 제1종 오류는 잘못된 정책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옳은 영가설(귀무가설)의 기각에 해당한다.
- ② 제2종 오류는 옳은 정책대안의 기각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잘못된 영가설(귀무가설) 선택에 의해 발생한다.
- ③ 제1종 오류는  $\alpha$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beta$ 로 표시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6회 8번

정책 분석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범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 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2종 오류라고 한다.
- ②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2종 오류라고 한다.
- ③ 3종 오류는 잘못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④ 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낸다.

|| 정답 || ②

|| 해설 ||

- ② 올바른 귀무가설의 기각 = 잘못된 정책대안의 선택 : 1종 오류  
 잘못된 귀무가설을 선택 = 올바른 정책대안의 기각 : 2종 오류(지문 ①)  
 문제의 정의 과정에서 문제를 잘못 인식하는 것 : 3종 오류(지문 ③)
- ④ 3종 오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문제를 잘못 정의내린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담당자의 주관에 개입하여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3종 오류의 발생은 정책결정자의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획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단주의적 기획관은 정책결정자가 3종 오류를 범하여 문제상황을 잘못 인식할 경우 어떠한 정책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현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즉 3종 오류는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지적한다.

[Summary] 정책분석 오류의 유형

|        |                                                                                                                              |
|--------|------------------------------------------------------------------------------------------------------------------------------|
| 제1종 오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평가하여 잘못된 대안을 채택한 오류</li> <li>옳은 귀무가설을 배제하여 발생</li> </ul>    |
| 제2종 오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잘못 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기각한 오류</li> <li>잘못된 귀무가설을 선택하여 발생</li> </ul>   |
| 제3종 오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문제의 정의를 잘못하여 대안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메타오류, 근본적인 오류)</li> <li>정책문제의 선택 자체가 잘못되어 발생</li> </ul> |

20.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 중 하나이다.
- ②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공정한 보상(reward)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 ③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의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④ 유인가(valence)는 개인이 특정 보상(reward)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②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 해설

- ①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 중 하나이다.
- ③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의 성과(performance)가 보상(reward)을 가져오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 ④ 유인가(valence)는 개인이 특정 보상(reward)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로서 보상의 유의미성을 의미한다.

### DIET 행정학 6.0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8회 6번

동기부여에 관하여 Vroom이 제시한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 ② 개인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와 결과가 보상을 가져올 수단성, 최종 보상의 매력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최종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하고, 내재적 보상을 더 중시한다.
- ④ 동기부여의 과정을 “ $\text{동기}(M) = f\{E(\text{기대, expectancy}), I(\text{수단성, instrumentality}), V(\text{유인가, valence})\}$ 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 ③ 최종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하고, 내재적 보상을 더 중시하는 것은 포터 & 로러의 업적 만족이론에 해당한다.

2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③ 1984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제외한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성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성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성인지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 독일(서독)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이다.
- ④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 사업 모두 도입되어있다.

- 해설

- ① 국가재정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에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2011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재정에서는 2013년에 도입되게 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9회 11번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예산과정에서 차별철폐를 위하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②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 해설

- ①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각각 예산안 및 결산안에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 심사 시 함께 심사를 진행한다.(즉,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과 독립적인 안건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인지결산 개요, 성인지예산 집행실적, 성평등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 ④ 성인지예산제도는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성 주류적(gender mainstreaming) 관점의 예산제도이다.

2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 ㉡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 ㉢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 ① ㉠      ② ㉡      ③ ㉠, ㉡      ④ ㉡, ㉢

|| 정답 || ④

|| 해설 ||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관점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티부(Tiebout) 가설과 동일한 관점을 취한다.

- ㉠ (×) 오츠의 분권화정리에 따를 때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공공재 공급보다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 오츠의 분권화정리에 따를 때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 지역 간 지역 간 외부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 ㉢ 오츠의 분권화정리에 따를 때 지방정부가 스스로에 의한 판단으로 자기 지역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선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국가에 의한 공공재 공급에 비해 효율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2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 ②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 ③ 세출예산의 항(項) 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 ③ 전용은 세항과 목 차원 즉, 행정과목 사이에서 예산의 유용이 이루어진다. 세출예산의 항(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유용은 이용의 개념에 해당한다.
-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 중 목적적 한정성(질적 한정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 해설

- ② 이용은 기관(機關) 간 또는 장·관·항 과목 간 예산의 유용을 의미한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20회 15번

다음 중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② 계속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규정할 수 있다.
- ③ 예산의 전용은 예산구조상 행정과목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항·세항·목 차원에서 예산의 유용이 이루어진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예산의 전용은 예산구조상 행정과목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세항·목 차원에서 예산의 유용이 이루어진다. 반면, 예산의 이용은 예산구조상 입법과목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장·관·항 차원에서 예산의 유용이 이루어진다.

- 해설

- ①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의 이체는 국회의 의결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변동시키게 된다.
- ② 계속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규정할 수 있다. 계속비 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결을 얻어 연장 가능하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가 법률,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의 것 이외에 재원확보 없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 등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24.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사법부가 임명한다.
-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② 문제 지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 해설

- 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에 의한 조사만이 가능하다.
- ③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행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와는 관계가 없다.
- ④ 옴부즈만 위법·부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정조치로서 직접 무효·취소를 선언할 수는 없으며 관계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효력밖에 갖지 못한다. 이에 옴부즈만에 대해 “이빨없는 감시견”이란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DIET 행정학 5.0 단원별 문제풀이 14회 1번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신청·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결정 등을 대상으로 하되, 이를 직접 무효·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진다.  
→ 이로 인해 옴부즈만은 권고사항을 담당 기관이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이 요구되며, 옴부즈만은 법적 성격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옴부즈만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직접 무효·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빨 없는 감시견(Watchdog without teeth)’으로 표현되며, 옴부즈만에 의한 행정통제의 실효성에 대해 한계가 지적된다.

- 해설

- ①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옴부즈만을 의회 소속으로 /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옴부즈만을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모두 통제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행위·비능률·직무 태만 등도 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신청에 의한 조사 권한뿐만 아니라 직권조사권한도 가진다.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한을 갖지 못하며, 신청에 의한 조사권한만을 가진다.

25.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 ④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① 빅데이터에는 기존의 기업환경에서 사용하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제어 데이터 등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및 사진과 이미지처럼 그동안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해설

- ② 빅데이터는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빅데이터는 모바일, IoT(사물인터넷)등의 보급으로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의사결정수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게 된다.
- ④ 빅데이터는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진다.

DIET 행정학 5.0 단위별 문제풀이 14회 15번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 ②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제어 데이터 등의 '반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사진과 이미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로서 '비정형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은 조직성과의 향상과 고객대응성 강화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도입한 DNA 색인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동향분석시스템'과 국민연금공단의 '여론정보수집분석시스템'이 빅데이터 활용사례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빅데이터에는 기존의 기업환경에서 사용하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제어 데이터 등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및 사진과 이미지처럼 그동안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